

社說

지역주민 참여한 교육자치 바란다

—시·도 교육위원회 출범에 부쳐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지난 9월2일 일제히 개원함에 따라 1952년 6월부터 실시되다 1961년 5·16군사정권에 의해 매각당했던 교육자치체가 30년만에 부활했다.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백년대계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 확보를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교육자치체는 이번 위원선출과정에서 주민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면 서 두번의 간접선거를 통한 결과, 금품과 향응 제공·담합·사건내정이라는 반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먹물로 얼룩진 채 그 모습을 드러낸 꼴이 되었다.

연간 40일 회기중에 일당 5만원을 받을뿐 거의 무보수 명예직인 교육위원직을 돈다발로 사려는 사람과 특정 정당을 찾아다니며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부채질하는 사람, 기조의회의 출마했다가 꼴찌로 낙선한 후 또다시 광역의회 공천과정에서 떨어진, 선거마다 기웃거리며 한몫하려는 사람, 월계수회 의원으로 2백만원씩 13명의 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여론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적 신념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30년만에 부활, 출발한 교육위원회에 끼어있다는 것은 이번 교육위원 선거 자체가 그 누가 뭐래도 '졸부'들과 퇴직 교육관료들의 '난장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더불어 요즘정부의 교육행정이 파행적으

로 흐르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초 사립학교법 개악이후 최근 시국선언 교사의 강제해직·폭행사건, 교원임용령 개정등 지나친 교육통제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시·도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계획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때부터, 교육의 중앙집권과 통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셈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육 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잡음과 타락양상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한 것은 각 시·도교육청의 조직상 교육행정 전반을 쥐고 주무루수 있는 일반직 출신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학부모나 일선교사,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보다 정치권력의 교육적 요구가 먼저 하향식으로 관철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곧 일선 교육행정이 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에 의해 계속 장악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가 자기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자치제의 핵심 요건이라 할수 있는 직선제에 의한 해당지역 주민의 교육행정통제권리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 구조마련과 여전히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예측된 상태로 놓여있는 교육행정에 일반직과 전문직의 실질적 조화를 꾀하는 일이어야만 더러워진 교육위원회의 지위를 다시 세우는 일임은 교육행정 당국자는 명심하기를 바란다.

교통문제 해결 위해 전철 연장돼야

—'신갈 전철 유치'사업을 보며

본교 수원캠퍼스를 비롯 서울근교 15개 대학 총 학생들이 8월중순경 회의를 통해 정부 및 경기도청의 관계기관에 신갈, 안산, 수원지역 전철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작년말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의 신갈 전철유치를 위한 자료조사를 시작으로 논의가 활발해져 왔으나 실질적인 활동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더우기 전철유치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청원한 것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신갈전철유치를 위한 각계의 노력들은 분당의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복선전철계획이 발표된 이후 시작된 것이며, 이는 서울근교 수도권의 이동인구가 과포화된 상태에서 서울시내는 물론, 양재-수원간 고속도로 구간이 3시간이상이나 걸리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본교를 포함한 한국의대 용인캠퍼스, 강남대 등 15개 대학의 학생중 서울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80%나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통학시간과 거리를 단축하는데 절대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들이 자체 캠퍼스타운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엄청난 통학시간과 교통체증에 기인한 점도 없지않기 때문에 만약 전철이 유치되면 캠퍼스타운 조성과 함께 귀가 시간에 구애받지않고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로써 교통문제 해결이 지방캠퍼스의 제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선결과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청은 이번 총·학장의 건의서를 받아들여 정부당국에 비슷한 내용의 필요성이 포함된 서안을 제출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국토개발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즉 지난 9월1일 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분당선 전철을 수원까지 연장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분당선이 완공되는 93년까지는 신갈전철유치가 계획에 포함될 시간이 있고 그동안 정부예산만 책정된다면 언제라도 연장할 수 있어 계속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청, 학교당국, 학생들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진다.

이와 함께 학교주변지역 주민, 산업체들과 연계해 홍보 및 여론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수원, 신갈 지역의 지역사회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이익집단을 형성한다면 정부정책에 좀 더 압력을 가해 전철유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당국은 수원·용인 지역에 소재한 15개 대학 5만여명의 학생과 인근 주민들과 산업체의 수도권 통근·이동인구를 추산한다면 비록 막대한 재정이 드는 전철이지만 추진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정부당국은 수원·용인지역 통학생들의 고충과 서울-수원간 교통체증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정해 고른 국토발전을 꾀해주길 바란다.

표류하는 범민주연합

—야권재편론의 의미와 민족민주 진영의 대응



1. 문제 제기

상반기 정치의 쟁점이었던 5월 정국과 광역의회선거는 결국 야권과 민족민주진영의 정치력의 부재에 힘입은 여권의 무난한 승수와 선거승리로 종결되었다. 특히 낮은 투표율, 반정치적 투표행태, 정당에 대한 고정적 지지 등으로 집약되는 선거행태의 배후에 신민·민주 등 보수야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나타났다. 결국 신민·민주 양당과 민족민주진영은 국민대중의 정치력을 조직하지도 못했으며 대중의 동태적 정치성을 따라가지도 못하였다. 즉 '기존정체'를 대신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부응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5월정국과 광역선거에서 나타난 보수야권과 민족민주진영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각 각 기존 야당들의 충원·개혁·통합, 그리고 민족민주진영의 내부구심력 확보와 현실 정치역량의 제고로 모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장기적 실천이 요구되는 민족민주진영의 구심력 확보문제와는 달리, 92년 정국교체기에 어떻게든 대처해야만 하는 보수야권의 대응은 그 어느때

보다 국민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적인 변화에 의해 추종되고 있는 국내정치·이데올로기 상황의 변화는 일단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민주·독재의 양분법이 무너지고 제도적 방식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해지면서 정치세력들이 다기화된다. 둘째, 이러한 분화로 인해 극우적 수구세력과 급진적인 정치세력이 공히 정치적으로 쇠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어느 세력도 야권통합 결렬의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며, 또 실록 이번에는 통합이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총선후나 대통령선거를 앞둔 새로운 정치상황에서는 다시금 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야권통합의 명분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이후의 정치국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신민-민주의 일부세력과 민족민주진영의



△민족민주진영은 이렇듯 국민대중을 정치적으로 조직하지 못했으며, 대안 실현의 힘을 결집할 수 없었다

정권 교체기 맞춘 야권통합 기회주의 속성 드러내 독자적 정치세력화 모색해야할 민·민세력

우선 기왕의 제반 야권재편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근거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II. 야권 재편론 비판적 검토

보수야권은 광역선거에서 패배한 후 다양한 경로로 야권의 재편을 모색해 왔으나 현재까지 제 되고 있는 재편론들은 진정한 정치적 대안으로 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야권통합론부터 검토하기로 하자.

신민당 주류가 주장하는 신민 중심 흡수통합론, 신민당 비주류가 주장하는 당권 양보·대권 보장 통합론, 민주당 범주류가 주장하는 기존 지도부 퇴진 후 당대 통합론 또는 공동 대표제에 의한 실질적인 당대 통합론 등이 야권통합의 대체적인 흐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들은 모두다 정치세력들의 이해타산에 입각한 제안들이다. 그러나 야당이 야권통합논의를 계속

일부가 제출하고 있는 범야권통합론이 있다. 이들은 내용상 '개혁을 동반한 수권정당'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기존 야당의 한계에 대한 지적,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필요성의 제기 등의 측면에서는 발전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현실적인 힘이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범야권통합론은 특히 이를 제기하는 세력들의 현실적 경험, 즉 평민연이나 민주연합과 등에서 제기했던 '제도권 정당내에서 독자적인 불력을 결집하여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들이 보수야권의 현실정치역학에 의해 실현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야권재편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야당통합을 주장하는 세력사이에서의 합의, 그리고 이들과 범야권통합을 주장하는 세력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가능한가로 모아지게 되는 것이다.

III. 대안으로서의 정치세력화

야권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필자는 그것을 현재의 보수야권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가능성으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야권통합의 현실은 보수야권의 통합을 유일한 대안으로 상정했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비판적인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야권통합을 가능한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또는 어느 정도 예측되기가 하였던 사실의 하나로서 받아들여 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 민족민주진영에게 있어 문제는 야권통합이라는 대안이 가능했음을 경우조차도 마땅히 모색되어야 할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전략적 대안을, 그 하나의 전술적 대안이었던 야권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현재의 상황에 입각하여 새롭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모아진다.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세력화라는 전략적과제에 의거하여 야권통합의 제 논의를 평가할 경우 야권통합의 실패까지도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부르조아지의 전략적 정치수준의 저급성을 폭로함으로써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당위성과 그 현실적 가능성을 보장시켜 주는 객관적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보수야권의 이합집산과정이나 민족민주진영의 대외에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논의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으며, 실록 논의가 통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로 정치·운동의 현실로 전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야권통합을 배타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민족민주진영의 중·장기적 목표인 것이며, 적어도 당면의 정치현실은 민족민주진영에게 독자적 정치세력화 못지않게 민주대연합, 그것의 한 형태인 야권통합, 그리고 그것의 구체화로서 '범민주세력통합수권정당'건설의 문제를 중요한 정치실천의 영역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야권재편은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범야권통합세력과의 정치적, 실천적 합의를 부여받아야만 소통할 수 있는 야권통합이 그 의미를 지닐 것이다.

고 성 국

(본고 감사·정치학)

SAMSUNG Electronics

품이있는 도전의 세계-휴먼테크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온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딛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는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욕의 현장입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